

시론

# 분야별 개혁 조화되고 있나

**柳錫春**  
연세대 교수  
사회학



집권 2년을 향한 '국민의 정부'는 여전히 개혁을 화두(話頭)로 삼고 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선 이후 개혁의 도마 위에 올라가지 않는 영역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을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금융은 물론이고 이를 뒷받침해온 산업구조, 즉 재벌체제가 철폐를 맞고 있다. 교육 또한 'BK21'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근본적인 수술을 받고 있다. 바로 어제(8일)는 '인신보호'를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이 발표됐다. 며칠 전에는 '부(富)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세제개혁이 있었고, 그 며칠 전에는 '생생적 복지'를 내세운 서민정책이 등장했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의 각론 하나 하나는 모두 나름대로 의의가 있는 개선책임에 틀림없다. 관치금융, 선단식 경영, 경쟁력 없는 교육, 빈익빈 부익부, 인권 등 지금껏 한국사회가 간직해 왔던 폐해를 고쳐보자는 의도에서 개혁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문제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고쳐보자는

데 누가 반대할 것인가.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추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론이 분분하다. 일부에서는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인적 청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제도의 개혁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국민들이 피곤해 한다는 평가가 있는가 하면, 기득권 집단의 조직적 저항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혁의 입체성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작업에는 아무도 체계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정한 분야의 개혁이 다른 분야의 개혁과 유기적으로 조화되고 있는지를 따져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왜냐하면 개혁은 각론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총론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개별적으로는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분야의 개혁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삐걱거리면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예를 들어보자. 현재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별 기업 단위로 기업구조를 재편하는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까지 재벌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기업에만 국가의 특혜가 제공돼 정경유

차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으니 이제부터는 소수정에 전략 대신 광범위한 시장 경쟁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문제만 떼어서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는 교육에 대해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수의 대학을 선별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이미 상당한 기

“  
경제는 신자유주의  
교육은 개발주의  
각론마다 따로 놀아  
”

득권을 누리고 있는 서울대를 중심으로 한 소수의 국립대학만이 다시 한번 정부의 특혜를 받게 됐다. 이 사안도 따로 떼어 생각하면 나름대로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능력있는 대학을 선별, 집중적으로 지원해 그들로 하여금 한국의 교육을 이끌게 하겠다는 생각은 누가 들어도 그럴 듯한 개혁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두 가지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사실이다. 사회의 한

분야에서는 국가의 특혜를 제도화하고, 다른 분야에서는 시장경쟁을 제도화하면 결과는 무엇이 될 것인가. 현재의 개혁은 사회의 모든 부문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신자유주의적 입장과,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개발주의적 입장이 혼재하고 있다.

개혁의 비일관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당을 창당해 지역당을 뛰어넘겠다면서, 당내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묵살된다. 재벌의 황제식 경영에는 칼날을 들이대면서, 정당의 황제식 운영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니 받아들이라고 한다. 나아가 대통령의 개혁철학을 공무원이 학습하는 일을 게을리해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다는 질책에 이어서, 개혁은 시장중심의 민주적 사회를 지향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진다.

사회는 시스템이다. 시스템이란 전체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이 서로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지 않으면 작동하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개혁 프로그램은 시스템으로 운용돼야 하고, 또 시스템으로 평가돼야 한다. 개혁의 각론이 서로 조화되지 못하면서 개혁의 총체적 의미를 끌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설득력있는 개혁을 위한 입체적 평가가 절실하다.